

##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 제429조의2 및 제430조”를 “제429조의2, 제430조 및 제449조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법 제449조제1항·제2항”을 “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.

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48조제1호를 삭제한다.

별표 제2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. 다만,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가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.

## 과태료 부과기준

### 1. 목적

이 기준은 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 제26조에 따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 제449조제1항제20호(법 제131조제1항, 제146조제1항, 제151조제1항, 제158조제1항, 제16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)·제36호·제37호·제38호·제39호·제39의2호·제39의3호·제39의4호, 제3항제7호·제8호(법 제131조제1항, 제146조제1항, 제151조제1항, 제158조제1항, 제16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)·제8호의2·제8호의3·제8호의4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과태료 산정방식

가. 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(같은 법시행령(이하 ‘시행령’이라 한다)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.

나.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

(1)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.

(2) (1)의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.

※ 법 제449조제1항제39호부터 제39호의4까지 및 제3항제8호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(이하 ‘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’라 한다)를 한 자가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로서 주체·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·일자 등이 다른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행위를 구별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.

(3) 다만,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※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·장소적 근접성, 행위의사의 단일성,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.

※ 법 제449조제1항제3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하나의 소액공모와 관련하여 법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2개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태료를 각각 부과

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다.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(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을 산정한다.

라. 위반자에게 가중·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·감면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.

마.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,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및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3. 예정금액의 산정

가.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및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금액을 산정한다.

나. 다만,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
#### (1) 과태료 부과비율 기준

결과 \ 동기	상	중	하
중대	기준금액의 100%	기준금액의 90%	기준금액의 75%
보통	기준금액의 90%	기준금액의 75%	기준금액의 50%
경미	기준금액의 75%	기준금액의 50%	기준금액의 25%

#### (2)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

##### (가) 위법행위의 동기

- a.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
- b.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고의에 의한

경우가 아닌 계속·반복적 위반행위 등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
- c.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. 다만,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(나) 위법행위의 결과

- a. 중대 :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(호가의 형성 포함),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저해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
- b. 보통 : 기타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c. 경미 :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격 형성(호가의 형성 포함) 및 거래량 등 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. 다만, 위반행위가 호가 규제 위반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.

#### 4.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

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차감한 비율을 예정금액에 적용하며,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한다.

가. 가중사유

- (1)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(법 제449조제1항제3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(이하 ‘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’라 한다)는 1년 이내)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.
- (2) 공모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로서, 법 제174조, 제176조, 제178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나. 감경사유

- (1)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경우 공모금액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정금액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위반 유형	감경사유
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②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제출 ③ 청약증거금 관리	실제 모집·매출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
④ 소액공모 감사보고서 제출 ⑤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⑥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 매출서류 제출	위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니거나, 주주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

- (2)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기관 인지 전에 시정 또는 신고한 경우, 당해 예정금액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(단, 시정일수 산정시 공휴일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,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)

시정일수	3일 이내 시정	4~6일 이내 시정	7일경과 후
감경비율	50% 이내	40% 이내	30% 이내

- (3) 보고·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해 투자자가 보고·공시의무 대상에 대한 진실한 내용을 보고·공시기한 이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## 5. 과태료 부과 면제 등

가. 위반자의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(1)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
- (2)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
- (3)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·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
- (4)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조치의 실효가 없는 경우

나.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·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장 총칙	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26조 제5항·제8항, 제429조, <u>제429조의2 및 제430조</u> 와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376조, 제377조 및 제37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(이하 "금융위"라 한다) 또는 증권선물위원회(이하 "증선위"라 한다)가 법, 법에 의한 명령, 금융위·증선위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(이하 "위법행위"라 한다)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429조</u> <u>의2, 제430조 및 제449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	
제3절 조사결과 조치	
제26조(과태료의 부과)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<u>법 제449조제1항·제2항</u>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	제26조(과태료의 부과) ① ----- ----- <u>법 제449조제1항</u> <u>부터 제3항</u> ----- -----

는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.

<신 설>

### 제5장 보칙

제48조(준용규정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

1.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
2. ~ 3. (생략)

<신 설>

-----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.

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48조(준용규정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<삭 제>

2. ~ 3.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. 다



만,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  
료가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  
정한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 
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 
과태료로 부과한다.